

“내 정보, 내 맘대로 가공활용” 신용정보법 국회 문턱 넘나

내일 국회서 신용정보법 논의
금융당국, 개정안 통과에 총력
금융사-핀테크 서비스 신호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2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신용정보법 공청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국회문턱을 넘지 못했던 신용정보법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 산업 등 데이터 산업 정착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이달 중 개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마이데이터 산업을 위한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간의 서비스 개발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8일 금융업·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신용정보법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지난해 11월 신용정보법을 발의한 김병욱 의원은 “우선 빅데이터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한 신용정보법에 초점을 맞추어 예정”이라며 “경제활성화를 위한 질의도 이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이번이 아니면 개정 작업이 쉽지 않을

것 보인다”며 “통과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개인의 신용정보에 이동권을 도입해 데이터를 분석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골자다. 개인정보 이동권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동시킬 수 있게 하는 권리다.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 개인이 해당

기관에 본인의 사회보험료, 통신료 납부 실적을 신용정보회사, 금융회사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신용평가 상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내 금융정보를 통합적으로 한번에 조회하고 소비행태나 위험성향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이나, 자문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개정안 통과가 늦춰지면 서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은 지지 부진한 상황이다.

핀테크 기업 관계자는 “개인신용정보는 보안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더라도 완벽할 수 없다”며 “더구나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소형 (핀테크)기업들이 활발하게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험리스크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선 법안이 통과돼야 활발하게 서비스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신용정보법 개정 이전에도 가능한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일반신용DB 제공)을 통해 은행, 카드, 보험 등 5000여개 금융사에 수집된 4000만명의 신용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이한진 금융위 금융데이터 정책과장은 “일반신용DB 제공 서비스는 신용정보법 개정과 무관하지만 이후 진행될 데이터 거래소와 데이터 전문기관은 신용정보법이 개정돼야 더욱 효과적으로 운

영할 수 있다”며 “이달 중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를 대비해 데이터 표준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워킹그룹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등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은 금융 분야 데이터 제공 범위와 비용, API 규격, 보안 대책 등을 논의한다.

이 과정은 “데이터는 적극 활용하되 오남용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데이터 활용에 대한 심사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P2P 대출거래의 제도화를 위한 법안 등 여러 금융 관련 법안은 아직 논의 시점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정안은 그나마 빠른 처리가 가능하지만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등 법 자체를 거의 새로 만드는 제정법이라 입법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지난해 여성기업인이 수출 70억 달러 전인 “서민 부채, 민간과 협업해 맞춤 상담 이뤄야”

수출 여성 기업 9290개 ‘사상 최대’
전체 수출기업의 10%... 6%p 증가
전년 대비 기업수·수출액 2배 경증

구분	수출기업수	수출액
2015년	4860개	36억6620만
2016년	4715개	34억7270만
2017년	4528개 (전체 3.3%)	34억7820만
2018년	9290개 (전체 9.5%)	69억3680만

/자료=여성경제연구소

지난해 여성 기업인들이 경영하는 기업체의 수출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체 수출기업의 약 10%를 차지한 것. 이는 2017년 대비 약 6%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8일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여성경제연구소의 ‘수출 여성 기업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수출 여성 기업은 총 9290개로 사상 최고 수준이었다. 보고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보유한 수출데이터와 한국기업데이터가 보유한 여성기업 데이터 110만 개를 사업자등록번호로 매칭시킨 수출 여성 기업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수출 여성 기업은 2015년 4860개에서 2016년 4715개, 2017년 4528개로 감소하다가 2018년 9290개로 한 해만에 두 배 넘게 성장했다.

수출 여성 기업이 전체 수출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늘었다. 2018년 수출 여성 기업은 전체 수출기업의 9.5%로 2017년 3.3%에서 3배 늘었다. 이는 전년 대비 6.2%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2018년 전체 수출기업은 9만7397개사였다.

여성 기업의 수출금액도 역대 최고 규모를 기록했다. 2018년 여성 기업의 수출액은 69억3680만 달러였다. 이는 2017년 34억7820만 달러의 약 두 배다.

수출 여성 기업의 성장은 조사 모집단인 여성 기업 수가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조사됐다. 여성경제연구소 김보례 팀장은 “한국기업데이터가 보유하고 있던 여성 기업 데이터가 2017년 약 70만 개였는데, 2018년 약 110만 개로 40만 개가 늘어 기본적으로 모집단 수 자체에 변동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여성 기업 수의 급증은 신

규로 창업했던 곳도 있지만, 남성 대표가 운영하던 기업 대표가 여성으로 바뀌면서 여성 기업으로 전환되는 등 기업들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다만, 지난해 여성 기업의 수출액 비중은 1.1%로 수출기업수 비중보다 현저히 작았다. 김보례 팀장은 “작년 우리나라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여성 기업의 수출액도 늘었지만, 전체적으로 수출이 너무 늘어 여성 기업의 수출액 비중이 유지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업종별 수출 여성 기업의 수와 수출액은 제조업 비중이 가장 컸다. 제조업 품목을 수출하는 여성 기업은 총 4284개사로 수출액 37억3490만 달러를 기록했다. 도매 및 소매업(3714개 사, 27억4450만 달러),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94개 사, 3610만 달러), 운수 및 창고업(135개사, 730만 달러)이 뒤이었다.

수출액 상위 5대 품목은 ‘보일러·기계류’ (3960개사, 10억8110만 달러), ‘전자기기·TV·VTR’ (2714개 사, 7억7530만 달러), ‘플라스틱과 그 제품’ (2720개사, 6억3070만 달러), ‘향료·화장품’ (1487개 사, 4억9080만 달러), ‘광학·의료 측정·검사 정밀기기’ (1180개 사, 4억5850만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기업의 수출액 상위 5대 국가는 중국, 베트남, 일본, 미국, 홍콩 순이었다.

/배한민 기자 ericabae1683@

‘서민상담 활성화 방안’ 포럼 조성목 서민금융위원장 제안

한계·다중채무자의 빚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 상담기구가 긴밀하게 협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8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개최된 ‘민간 서민상담 활성화 방안’ 포럼에서 “한계·다중채무자를 위한 정책금융상품이나 채무조정, 사법적 개입 등의 제도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며 “개개인의 사정에 맞는 복합적 처방이 핵심인데 이는 심층 상담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양한 형태의 민간 상담기구들이 함께 협업함으로써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며 “서민금융연구원이 중심이 돼 현재 19개 기관으로 구성된 민간상담기구협약기관을 더 늘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내 신용상담 현황과 해외의 민간 상담 프로그램을 비교하고, 실제 상담을 받은 사례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박덕배 국민대학교 교수는 ‘민간 서



서민금융연구원장은 8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민간 서민상담 활성화 방안’ 포럼을 개최했다. /홍민영 기자

민 금융상담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서민을 대상으로 한 민간 신용 상담이나 교육이 강화돼야 하는데 아직 국내 금융상담은 주로 공적 기구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다양한 민간 상담기구의 물리적 통합 및 기능적 통합과 더불어 상담사의 자격 기준이나 역량 강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해외사례를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소개했다. 영국은 신용상담이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인프라로 작동하며 관련 프로

그램이 잘 구축됐다. 일본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밀착형 재무상담이 이뤄지고 있으며, 미국은 파산신청 전 신용상담을 의무화하고 있다.

서민금융연구원은 이날 채무자 개개인을 위한 구체적인 상담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 하나저축은행 및 한국금융솔루션, 한국FPSB와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하나저축은행은 자사 고객 내 저신용자를 위한 신용상담을 위탁했고, 한국금융솔루션은 온라인 신용상담 플랫폼을 개발키로 했다. 또 국제공인 재무설계사(CFP) 자격인증기관인 한국FPSB는 개인 종합재무설계 상담부문을 맡아 서민금융연구원과 협업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포럼은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금융위는 지난해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방안과 관련해 ▲서민자금공급체계 개편 ▲신용회복 지원제도 개선 ▲서민금융 전달체계 개선 ▲안정적 재원 확보 등 4대 부문에 걸친 추진과제를 내놓은 바 있다. /홍민영 기자 hong93@

중소 20% ‘주52시간 근무’ 초과

시행 6개월 앞둔 2.7만곳 대상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50~299인 사업장의 약 20%는 주 52시간을 넘겨 근무하는 노동자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올해 1월 기준으로 50~299인 사업장 약 2만7000곳(종사자 283만명) 중 주 최대 52시간 초과자가 있는 기업은 약 5000곳(18.5%)”이라

고 밝혔다.

50~299인 사업장 5곳 중 1곳꼴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중소 규모인 이들 사업장은 인력 충원 등의 여력이 부족해 주 52시간제 안착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50~299인 사업장의 노동시간 단축 준비 작업을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이달 중으로 48개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노동시간 단축 현장 지원단’을 설치해 본격

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주 52시간 초과 노동자가 많고 노동시간 단축 준비가 부족한 사업장 약 4천곳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과 고용지원관의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고대제 개편이나 유연근로제도 도입 등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지원단이 상담을 제공한다.

지난 1일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간 노선버스, 방송, 금융, 대학 등 특례 제외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은 대부분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가 완료 단계라고 노동부는 평가했다. /석대성 기자 bigstar@